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김홍중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선임연구위원
(hckim@kiep.go.kr, Tel: 044-414-1036)
- 임유진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연구원
(yjlim@kiep.go.kr, Tel: 044-414-1064)

차 례 ●●●

1. 브렉시트의 논의 배경
2. 영국과 EU의 경제관계
3.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 ▶ 영국의 EU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일(6월 23일)이 다가오면서 브렉시트와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 2016년 2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개혁안이 합의된 후 일부 보수당 유력인사들과 영국 독립당 당수가 EU 탈퇴지지 선언을 하면서 영국 내 브렉시트 논란이 과열되고 있음.
 - 4월 15일 공식적인 국민투표 캠페인이 시작된 후 ‘유럽 안에서 더 강한 영국(Britain Stronger in Europe)’이라는 EU 잔류 진영과 ‘탈퇴에 투표하라(Vote Leave)’는 EU 탈퇴 진영 간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음.
- ▶ 영국의 EU 탈퇴 논의는 전통적으로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EU 경제 침체와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심화됨.
 - 영국은 EU 회원국 중 역내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장 많은 역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EU 예산의 순기여국으로서 유로존 위기 이후 대륙 회원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2015년의 시리아 난민사태는 역내 자유로운 인적이동 및 공동 이민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고조시킴.
- ▶ 브렉시트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금융 및 기타 서비스산업, 환율, 경제성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국과 EU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영국-EU 관계에서 상품무역의 위축, 원산지 충족 어려움, 서비스 시장통합의 지체, 서비스 공급자로서 영국의 지위 축소, 투자 위축, 환율의 안정성 감소, 경제성장 약화 등의 영향이 예상됨.
 - EFTA 회원국들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예산기여, 이민정책, EU 규제, 소비자 가격, 연구개발 등에서 당초에 탈퇴 후 예상되는 비교우위의 증대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 브렉시트 찬성 결과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유럽 및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영국과 EU를 제외한 세계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영국과 EU 간 경제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설정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는 양측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FTA를 포함한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문제 △ 원산지 누적의 허용 여부 △ 한-영 FTA 협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브렉시트의 논의 배경

■ 영국의 EU 탈퇴(Brexit,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6월 23일 실시 예정)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 2016년 2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개혁안이 합의되면서 영국의 EU 잔류에 대한 찬성여론이 확산되었으나 곧 이은 일부 유력인사들의 EU 탈퇴 지지 선언으로 브렉시트 논란은 가열되는 양상임.
- 카메론 총리의 영국정부는 EU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각종 보고서 발표와 캠페인을 전개하며 브렉시트 반대에 힘을 쏟고 있으나 내각과 집권당인 보수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린 상황임.
-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前 런던시장,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영국 법무장관을 포함한 보수당 주요 인사들과 나이절 패라지(Nigel Paul Farage) 영국독립당(UKIP) 당수 등이 브렉시트를 찬성하고 있음.
- 지난 4월 15일부터 시작된 공식적인 국민투표 캠페인은 ‘유럽 안에서 더 강한 영국(Britain Stronger in Europe)’이라는 EU 잔류 진영과 ‘탈퇴에 투표하라(Vote Leave)’는 EU 탈퇴 진영의 주도하에 팽팽한 접전으로 이어지고 있음.

■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2013년 1월 카메론 총리의 인터뷰 이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구체화된 것은 2015년 5월 총선 이후임.

- 2013년 1월 카메론 총리는 블럼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할 용의가 있음을 처음으로 밝힘.
- 당시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구상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더 이상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음.
- 2015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단독과반을 확보한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관련한 보수당 내부의 분열과 유럽 경제침체 및 유로존 위기, 이민자의 급증으로 EU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다시 제안하였음.
- 당시 캐머런 총리는 EU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영국이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영국-EU 간 관계를 재설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EU와의 협상 이후 새로운 영국-EU 관계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천명한 바 있음.
- 2015년 11월 캐머런 총리는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영국의 EU 잔류를 위한 EU 개혁을 촉구하였으며 EU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
- 이에 따라 2016년 2월 18~19일 영국과 EU는 브뤼셀에서 협상을 통해 카메론 총리의 4가지 제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 합의를 이끌어 냈음.
-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보다 긴밀한 연합(ever closer union) 반대 △비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EU 제정 법률의 전면 거부 혹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레드카드 도입 △이주민의 복지혜택 제한 및 유사시 이민 유입 차단 권한 부여 등으로 영국이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이 포함됨.
- 협상 타결 직후 카메론 총리는 국민투표 날짜를 6월 23일로 정하여 발표함.

표 1. 2016년 2월 EU 정상회의 합의내용 및 평가

	2016년 2월 EU 정상회의 주요 합의안	평가
보다 긴밀한 연합	차후 조약 개정에서 영국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기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묵적인 것을 명시화
영국의 자주권	각 EU 회원국 의회가 55% 이상의 찬성으로 EU 제정 법률을 전면 거부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레드카드 도입	-
비유로존 차별방지	비유로존 국가가 유로존 정책결정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인식하면 유럽이사회에 회부 및 추가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 거부권이라기보다 일시적 유예에 그침.
영국에서 근무 중인 이민자의 복지혜택	영국 내 역내 노동이주민에게 첫 4년간 비기여성 근로세계혜택 금지 및 단계적으로 혜택부여(7년간 이 규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은 13년 중동부유럽국가는 5년 주장 ■ 일부 경제학자만이 이 정책으로 이민이 감소할 것으로 평가 ■ 영국의 국민투표 이후 유럽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영국 근무 중인 이민자 자녀의 아동수당	기존 영국기준으로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의 생활비 기준으로 지급: 2021년부터 시행(즉, 2020년까지 적용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지급 중단에서 지급액 삭감으로 합의 ■ 5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 ■ 상징적 의미가 강한 안건으로 아동수당을 중단해도 실질적으로 3천만 파운드 절감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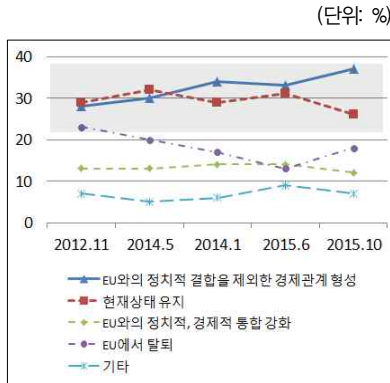
자료: *Financial Times*(2016)¹⁾을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 영국의 EU 탈퇴 논의는 전통적으로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EU 경제 위기와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강화됨.

- 영국은 역내 자유무역에 기초한 단일시장에는 찬성하나, 정치적 통합의 강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와서 강화되고 있음.
- o 영국은 1975년에도 당시 유럽공동체(EC) 탈퇴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으며, 당시 압도적인 표차(67.23% vs. 32.77%)로 잔류를 결정한 바 있음.
- o 영국과 EU 간 바람직한 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영국민은 ‘정치적 결합 없는 경제관계 강화’를 가장 선호(37%)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EU 탈퇴’와 함께 최근 들어 지지세가 상승하고 있음.
- o 반면, ‘더 긴밀한 통합,’ 또는 ‘현상유지’에 대한 지지는 줄어들고 있음(그림 1).
- 경제 위기 이후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2015년 가을 시리아 및 중동 난민의 대규모 유럽 유입은 영국 내에 EU 탈퇴 여론이 급격히 높아지는 주요 배경이 되었음.
- o 영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이후 회복 기초를 유지하고 있어 저성장 국면에 머물러 있는 유로존에 비해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임(그림 2).
- o 영국 국민은 EU가 직면한 주요 문제로 경제상황 및 실업률을 꼽았으며, 2015년 이후에는 이민과 테러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짐(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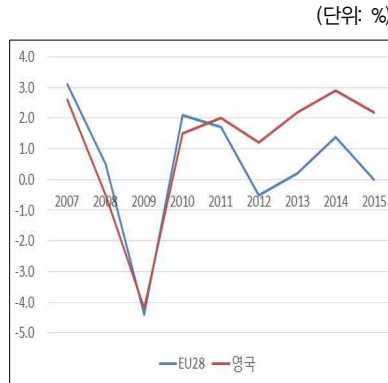
1) “Britain’s EU deal: the results and the verdict”(2016), *Financial Times*. (February 20)

그림 1. 향후 영국과 EU와의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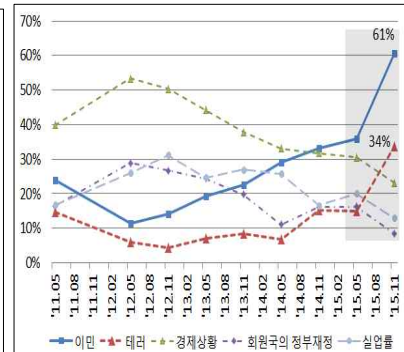
주: 영국 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Which of these options best describes your own preference for Britain’s future role in Europe?” 질문에 대한 답변 비중
자료: Ipsos MORI.

그림 2. 영국 및 EU의 경제성장률 추이



주: 실질 GDP 전년대비 성장률(계절조정).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3. EU가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한 영국 국민의 답변



주: “What do you think are the two most important issues facing the EU at the moment?” 질문에 대한 영국 국민의 답변 비중이며, 상위 5개 답변 추이임.
자료: Eurobarom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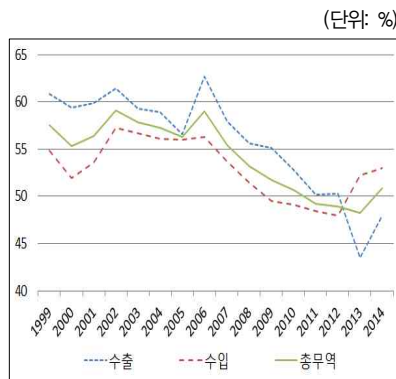
2. 영국과 EU의 경제관계

가. 교역

■ 영국은 EU 회원국 중 역내 교역의 비중이 낮으며,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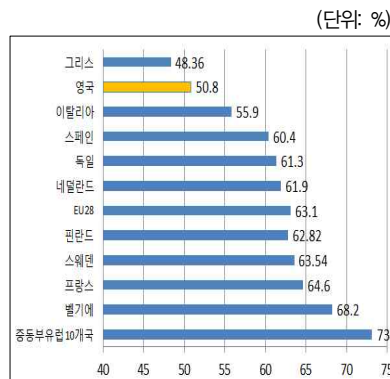
- 2014년 기준 영국의 對EU 총 상품무역비중은 50.8%로 절반 이상이 EU 회원국들과 이뤄지고 있음(그림 4).
- 그러나 영국의 역내 무역비중은 2014년 기준 EU 28개국 중 그리스(48%)를 제외하고 가장 낮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북미 등 비유럽권 지역과의 무역비중이 크기 때문임(그림 5).
- 영국의 對EU 수출비중은 47.9%로 對미국(11.9%), 對아시아(15.7%) 수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역내 교역의 비중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임.

그림 4. 영국의 총 수출입 중 EU 역내교역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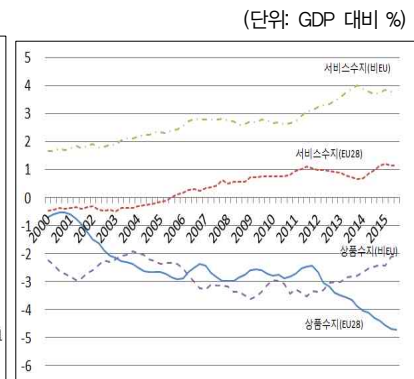
자료: Eurostat(유럽통계청).

그림 5. EU 회원국의 역내무역 비중



주: 2014년 기준. 역내무역 중 회원국 비중
자료: Eurostat(유럽통계청).

그림 6. 역내 및 역외의 상품·서비스 수지



주: 4분기 이동평균임.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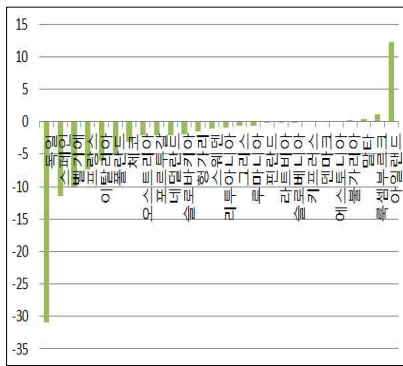
■ 2014년 기준 영국의 對EU 상품수지는 적자인 반면, 對EU 서비스수지는 흑자를 기록함(그림 6).

- 영국의 對EU 상품수지는 2012년 이후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는 역외 상품수지와 달리 적자폭이 커지는 양상임(그림 6).
- 상품수지의 적자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외에도 EU의 내수부진으로 對 EU 수출의 증가폭이 낮기 때문임.
- 영국의 對EU 서비스수지는 2006년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 GDP 대비 1%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그림 6).
- 영국은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등과의 교역에서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그림 7(c)).
- 상품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총교역에서 영국은 아일랜드 및 일부 중소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회원국들과의 관계에서 적자를 보임(그림 7).

그림 7. 영국의 對 EU 회원국의 무역수지(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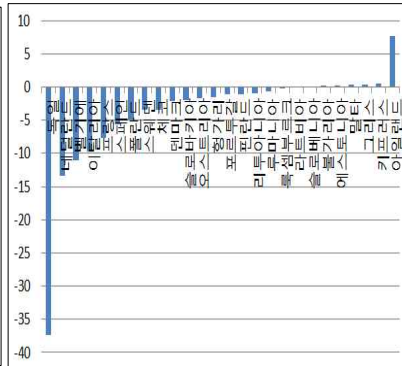
(a) 상품·서비스 무역수지

(단위: 10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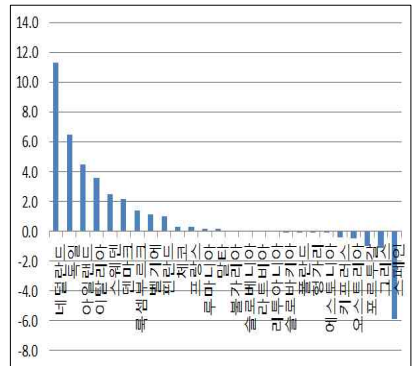
(b) 상품수지

(단위: 10억 유로)



(c) 서비스수지

(단위: 10억 유로)



자료: Eurostat.

나. 투자

■ 영국은 EU 회원국 중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제일 많이 유치하고 있으며, FDI 유입액 중 EU 회원국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014년 기준 EU 28개 회원국에 유입된 FDI는 7조 8천억 달러로 이 중 영국은 21.4%로(1조 7천억 달러) EU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최대 수혜국임(그림 8).
- 2014년 기준 영국의 FDI 유입액(누적기준) 중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유입 비중은 48%로서, 미국(24%), 아시아(7%), EFTA(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그림 9).
- 전기·수도 등(91%), 광업(68%), 도·소매(61%), 식·음료품(61%)에서 EU 투자의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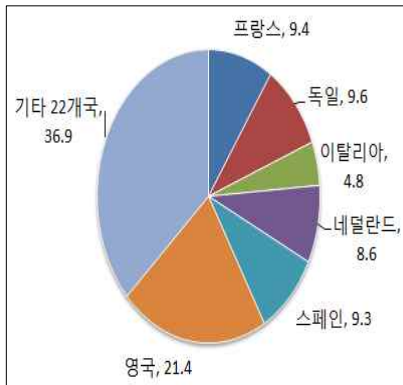
■ 영국은 낮은 법인세, 유연한 노동시장, 우수한 인재 확보 용이성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투자환경을 갖고 있으며 특히 역외국으로부터는 EU 단일시장 진입을 위한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영국은 타 EU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역내투자 유입액 규모는 독일,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이나, 역외로부터의 투자유입액이 크게 높는데 이는 영국이 비EU국가 기업의 EU 단일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했기 때문임(그림 10).

○ 세계 250대 기업 중 비유럽 기업의 약 60%는 런던에 유럽지역 본부를 두고 있음.²⁾

그림 8. EU 28개국의 총 투자유입액 중 각 회원국별 비중(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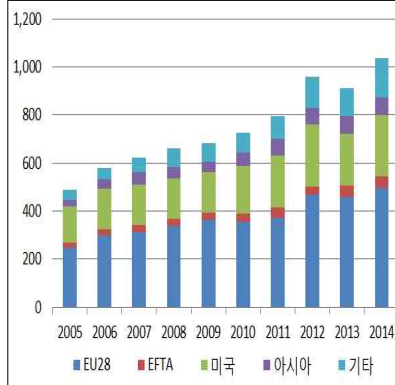
(단위: %)



주: 각 수치는 EU 28개국의 총 투자유입액(7조 8천 억) 중 각 회원국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UNCTAD.

그림 9. 영국의 국가별 FDI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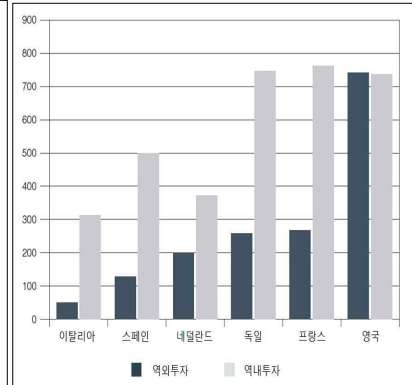
(단위: 10억 파운드)



자료: 영국통계청(ONS).

그림 10. 투자액 기준 역내 상위 6개국 비교(2012년 기준)

(단위: 10억 달러)



주: 역외투자는 비EU회원국으로부터, 역내투자는 EU회원국으로부터 유입된 투자액을 의미함.
자료: UNCTAD, HM Government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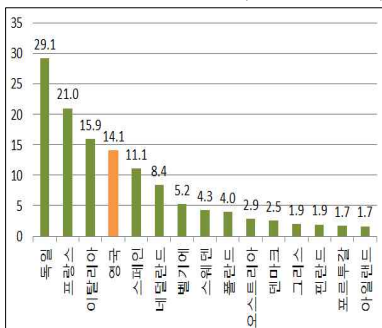
다. EU 예산 부담금

■ 영국은 1973년 유럽공동체 가입 이후 1975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서 EU로부터의 수혜금보다 기여금이 더 많았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는 순기여금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

- 영국은 EU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EU 예산에 4번째로 많은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어 순 수혜가 마이너스인 상황임(그림 11, 12).

그림 11. EU 예산에 대한 국가별 기여금(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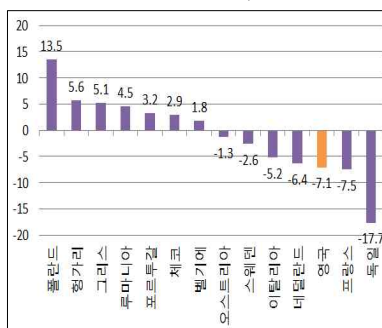
(단위: 10억 유로)



주: 2014년 EU의 총수입(국가별 부담금+관세 등 EU의 자체수입) 1,285.6억 유로 중 국가별 기여금 및 관세수입.
자료: European Commission.

그림 12. EU 예산의 국가별 순수혜금(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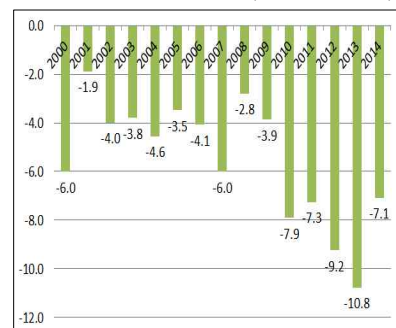
(단위: 10억 유로)



주: 영국의 수혜금액에서 기여금을 뺀 순 기여금액
자료: European Commission.

그림 13. 영국의 EU 순 기여금 추이

(단위: 10억 유로)



주: 1) 국가별 수혜금액에서 국가별 기여금(+관세수입)을 뺀 순 수혜금액, 2) 편의상 플러스 순수혜 7개국과 마이너스 순수혜 7개국만 표시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2) Deloitte(2014), "London Futures: London crowned business capital of Europe."

- 영국은 2014년 기준 141억 유로의 지출로 총 분담금의 10.6%를 차지하나 연구개발기금, 결속기금, 농업보조금 및 구조기금 등으로 EU로부터 받는 수혜가 71억 유로(EU 내 총 수혜의 5.4%)에 불과함.
- EU의 예산 중 40%가 농업보조금으로 지출되나 영국의 농업부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고소득 지역이 많아 그 수혜가 적을 수밖에 없음.
- 최근에 와서 영국의 EU 예산 순기여금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그림 13).
- 2004년 이후 중동부 및 남부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구조기금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3.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가. 개관

■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EU 단일 시장의 혜택 축소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증대로 영국 및 EU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 브렉시트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차이에 따라 대외무역, 투자, 금융산업, EU 규제 등 탈퇴 시 각 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 브렉시트 찬성측은 EU 회원국으로 적용된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주권을 회복함에 따라 맞춤형 대외 경제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지고 더 자유롭고 효율적인 영국 경제의 구축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영국 경제의 변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반면, 반대측은 단일시장의 이점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탈퇴 시에도 현재의 많은 의무가 그대로 존속함을 주장, EU 잔류를 촉구함.

표 2. 브렉시트 찬성·반대 입장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

		브렉시트 찬성 입장	브렉시트 반대 입장
무역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특혜무역협정, 양자무역협정체결로 EU 대안 마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관세장벽으로 교역 타격, 원산지 충족 난망 ▪ EU 및 제3국과의 새로운 특혜무역협정 수립에 5~10년이 소요될 것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도 EU 서비스시장 미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내 서비스 이동 제약, 서비스 수출 타격 ▪ 서비스 시장 통합과정에서 영국의 이해를 반영할 수 없음.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투자유치 정책으로 전 세계로부터 투자 유치 대폭적 증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증가세 둔화/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높음. ▪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특히, 역외투자의 급격한 감소 가능
금융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우수한 인력 및 인프라는 쉽게 대체할 수 없기에 큰 영향 없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EU 내 금융서비스 위축 가능성 ▪ 금융 중심지로서 시티의 지위 상실 가능성
EU 예산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예산 분담금 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퇴해도 상당규모의 분담금 지급해야

표 2. 계속

	브렉시트 찬성 입장	브렉시트 반대 입장
이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도한 역내 미숙련 이민을 막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련노동자의 유입 제한 이민자 유입감소로 잠재성장률, 소비지출 하락
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큰 영향 없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운드화 약세 및 변동성 증대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EU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와 차이 없거나 현 수준보다 규제부담 증가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의 투자, 기술, 경쟁력, 혁신, 기업가 정신의 확산으로 영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활성화 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 둔화 영국 내 상품, 서비스 가격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자료: 각종 자료로부터 저자 정리.

- 종합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영국과 EU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며 새로운 관계가 확립될 때까지 경제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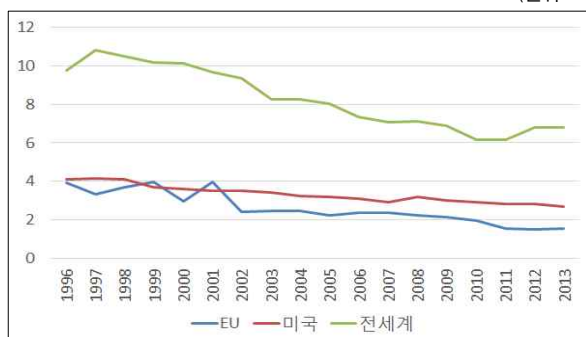
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 EU 탈퇴는 EU 단일시장에서의 탈퇴를 의미하는바,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해온 EU와의 자유무역 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EU 단일시장(Single Market)은 상품교역의 완전자유화가 보장되어 있음.
- EU 탈퇴 후, EU와의 특혜무역협정을 다시 체결하지 않을 경우 EU와의 교역시 WTO 회원국으로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적용될 것임.
- 특히 EU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MFN 관세가 낮은 편에 속하나 영국의 對EU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화학제품, 식음료품 및 담배 부문의 관세는 높은 편에 속함(표 3).
- 관세장벽이 다시 생길 경우 EU 역내에서의 영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수출감소 가능성이 높음(표 3).

그림 14. EU 평균 관세

(단위: %)



자료: World Bank,

표 3. 산업별 對 EU 수출비중, 무역수지 및 관세

	산업	對 EU 수출비중 (%)	무역수지 (십억\$)	MFN EU 관세
상품	자동차	35.0	-13.95	10%
	화학제품	56.6	-7.82	4.6%
	항공우주산업	44.6	2.56	-
	기계	30.7	-5.47	1.7-4.5%
	식음료품 및 담배	60.5	-16.56	평균 20%

자료: Open Europe, p. 31.

■ 영국의 EU 탈퇴 시 영국 서비스산업의 EU 진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 영국의 對EU 서비스 수지가 흑자인바, EU 탈퇴 시, 역내 자유로운 서비스 이동에 제한이 생겨 상품시장에서 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채택된 서비스지침(Services Directive)으로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등 모든 형태³⁾의 서비스 교역이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음.⁴⁾
- 서비스지침의 회원국내 도입 시기가 달라서 EU 내 서비스 교역은 일부 업종이 제외되나 전반적으로 볼 때 EU의 서비스 시장은 점차 통합 중임.
- 영국은 EU 탈퇴 시, WTO의 서비스 협정(GATS)하에 기존 EU 회원국과 서비스 양허제공에 대한 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표 4).
- 특히, 영국은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 부문에서 80%를 차지하며, 역내 서비스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바, 서비스 관련 부문의 협상은 영국 경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함(그림 15).
- GATS의 Mode4 형태의 서비스제공의 경우 EU 회원국내에서는 자격면허의 상호인정으로 인해 비교적 수월하게 인력이동이 가능하나 탈퇴하게 되면 각 회원국과 다시 협정을 체결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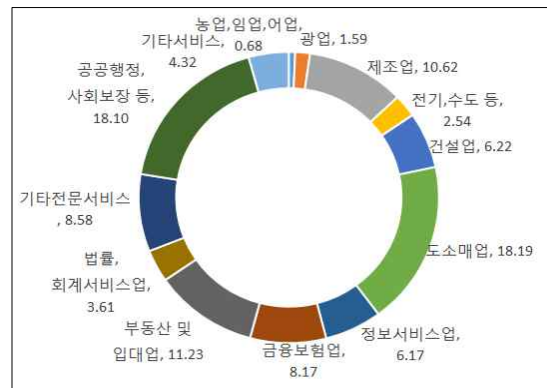
표 4. 산업별 對 EU 수출비중, 무역수지 및 관세

	산업	對 EU 수출비중 (%)	무역수지 (십억£)	시장접근
서비스	금융서비스	41.4	16.06	EU시장 접근규정
	보험	18.4	3.85	
	전문서비스	29.8	-1.92	회원국 시장접근규정

자료: Open Europe, p. 31.

그림 15. 2014년 영국의 산업 비중

(단위: %)



주: 총부가가치 대비 산업비중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브렉시트 시 통상부문에서 영국의 재량권이 증가할 수 있으나, 기존에 EU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에서 제외되어 추가적으로 제3국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해야 함.

- 영국이 EU 탈퇴 시 EU와 무역협정을 맺었던 각 국가들과의 통상협정을 다시 체결해야하므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⁵⁾

3) WTO 서비스협정(GATS)에는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을 생산자, 소비자 및 생산요소의 이동 유무를 기준으로 국경간 공급(Mode1), 해외소비(Mode2), 상업적 주재(Mode3), 자연인의 주재(Mode4) 4가지 형태(mode)로 구분한다.

4) 2006년 서비스지침의 시행으로 유통, 관광, 건설, 경영활동과 같은 분야(EU GDP의 46% 차지)에서 EU 회원국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특히 전문자격면허를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하기에 건축가, 의사, 수의사 등 또한 회원국의 자격면허를 가지고 EU 내에서 활동 가능함.

- EU는 53개의 무역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와 협상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음.
- 최근에도 EU는 캐나다(2014년 9월), 에콰도르(2014년 7월), 싱가포르(2014년 10월)와 협상을 완료했으며 일본, 모로코, 태국 및 미국 등과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 EU 회원국의 입장에서 역외국가와의 통상협상 시 EU의 공동통상정책(CCP: Common Commercial Policy) 범위 내에서 논의해야 하나, 탈퇴 시 영국의 재량 하에 협상이 진행되어 추가적인 시장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

다. 원산지 규정

■ 브렉시트 현실화 시, 영국과 EU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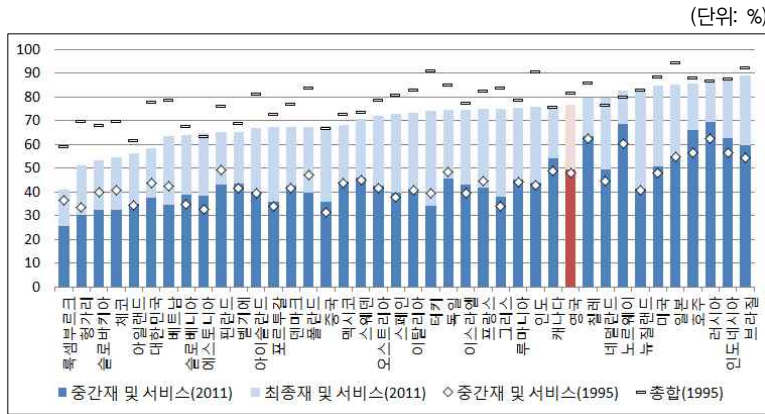
- 2011년 기준 영국의 총수출 대비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77%로 1995년 대비 감소(4.8%p)하였으며 국내 부가가치에서 중간재 생산비중은 49.5%로 증가(1.5%p)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긴밀히 통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함(그림 16).⁶⁾
- 2015년 기준 영국의 對EU 수출상품 중 중간재 비중이 58%, 수입상품 중 그 비중이 49%로 이는 영국의 산업이 EU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줌(그림 17).
- 특히, 2011년 기준 영국의 총수출 대비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산업은 연료(56.1%), 금속(51.7%), 자동차(44.4%) 부문으로, 이 부문의 생산과정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그림 18).
- 1995년과 비교했을 때 2011년 기준 각 부문에서 해외부가가치 비중이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영국의 총수출에서 해외 부품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영국은 EU와 생산과정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EU와의 무역협상에서 원산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원산지 규정에 의해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되고 협정이 정하는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에만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음.
- BIS(2013)는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 협정으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할 때 행정비용 등이 연 30억 파운드 혹은 거래상품 비용의 4~15%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함.⁷⁾

5) WTO(2015), "Trade Policy Review" Report.

6) OECD-WTO(2015), "Trade in value added: United King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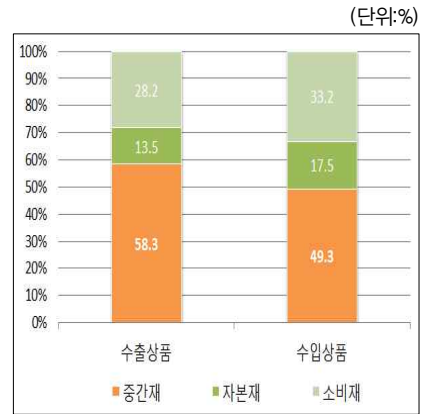
7) BIS(2013), "Trade and Investment Balance of Competence Review."

그림 16. 영국의 총수출 대비 국내 부가가치 비중
(1995년, 2011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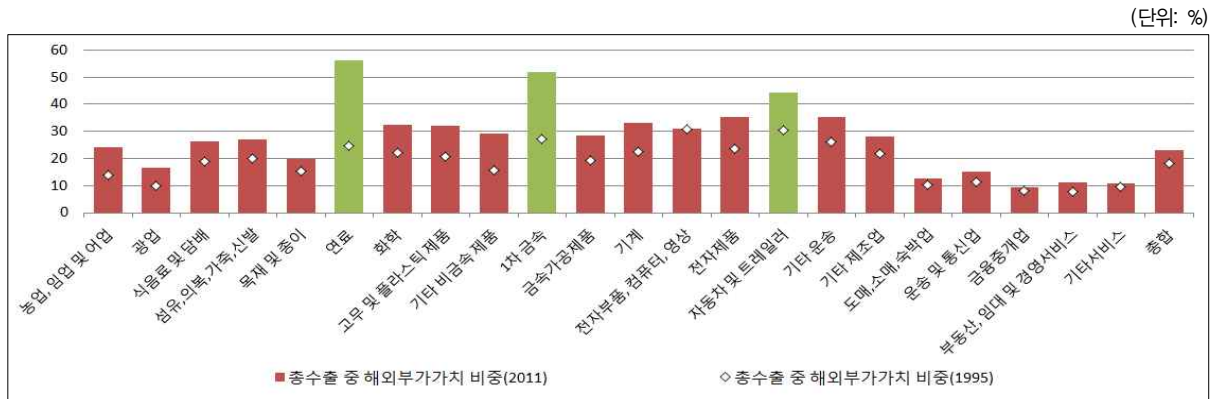
자료: OECD.Stat.

그림 17. 영국의 對EU 수출입
중간재 비중(2015년)



자료: Eurostat.

그림 18. 영국의 산업별 총수출 중 해외부가가치 비중



자료: OECD.Stat.

라. 해외직접투자(F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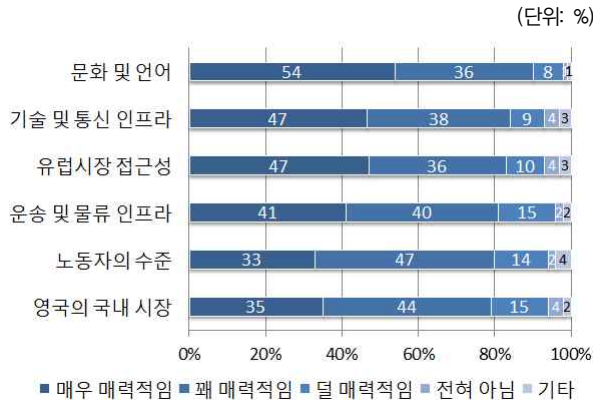
■ 영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요인은 EU 단일시장으로의 높은 접근성 외에 언어접근성, 낮은 규제 등 다양하나,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역내에서 법인의 면세혜택 등의 이점 상실로 투자유출 가능성이 높음.

- EU 내 모자회사간 지침(Parent-Subsidiary Directive)⁸⁾에 의해 EU 내 모자회사간 수익 재분배시 면세혜택이 제공되나 영국이 EU 회원국에서 벗어날 경우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영국 내 해외법인의 투자유출이 예상된다.
- 非EU 다국적기업의 유럽법인 절반 이상이 영국에 위치하고 있어, 영국의 EU 탈퇴 시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사라져 영국 내 유럽법인들이 다른 EU 회원국으로의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그림 19).
- 또한 영국의 FDI 유입에서 EU 회원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영국이 EU 회원국에서 벗어날 경우 영국 내 투자는 세금 면제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EU 회원국 기업들의 투자포트폴리오 변화가 예상된다(표 5).

8)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3-1040_en.htm.

- 따라서 영국이 EU 탈퇴 시, 영국 투자기업들은 과도한 세금에 시달릴 위험성이 높아질 것임.
- 이 경우 EU 및 회원국들과 협상을 통해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하여 탈퇴로 인한 공백을 메울 필요성이 있음.
- o 리스본조약(2009년)에 의거, 회원국 소관의 투자협정이 EU로 권한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투자정책과 관련해서는 EU 와 협상을 진행해야 함.

그림 19. 영국으로의 해외투자 요인



자료: Ernst and Young(2015).

표 5. EU의 영국 내 산업별 FDI 현황

(단위: 백만 파운드)

산업	EU FDI	EU비중	EU최대 투자 국
유통, 도매	83,222	61%	LU, NE, DE
광업	67,534	68%	-
금융업	47,543	17%	NE, DE
ICT	48,744	57%	FR, DE, LU
전기, 수도 등	45,630	91%	-
수송	29,040	37%	DE, NE, ES
음료, 식품	27,792	61%	NE, FR, LU
총	495,798	48%	

주: 광업과 전기, 수송부문의 경우 EU 최대투자회원국에 대한 정보 없음.

자료: ONS.

마. 금융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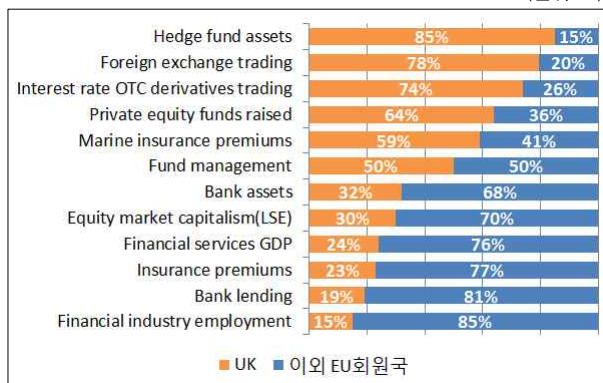
■ 영국은 EU 탈퇴로 금융 산업에서 많은 도전이 예상되는데, 역내외 금융거래에서 영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2013년 기준 EU 내 금융거래에서 영국은 다른 회원국을 크게 상회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함(그림 20).
- o EU 내 헤지펀드 자산의 85%, 외환거래의 78% 등이 영국에서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영국의 금융서비스 산업은 EU 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금융서비스의 경우 역내에서 모국감독원칙(Home country principle)⁹⁾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영국에 모기업을 둔 금융회사의 對EU 금융서비스 공급에 타격이 있을 수 있음.
- 영국 내 금융시장은 전 세계 유로화 거래의 45%를 담당하고 있으며, 1/4이 USD/EUR관련 거래, 1/3은 유로화 관련거래로 EU 탈퇴 시 외환거래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o 2011년 ECB는 비유로존 지역에서 유로화 청산거래소(clearing house)의 설립을 금지하는 등의 유로화 거래 금지 정책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영국은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근거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2015년 5월 관련 ECB 정책이 무효로 판결난 바 있음.¹⁰⁾

9) EU 단일시장 내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1999년 EU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금융서비스실행계획(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이 시행되었는데, 이 실행계획에 따라 역내에서는 모회사 국적을 기준으로 현지진출 자회사가 규제감독을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금융규제환경이 자유로운 영국에 모기업을 둔 금융기업의 역내 회원국 진출이 수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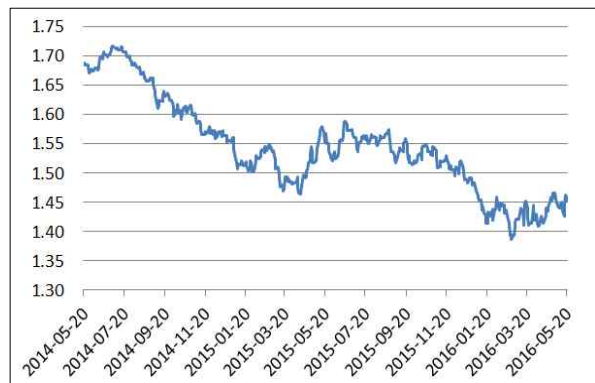
-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의 경우도 2014년 1월 1일 도입예정이었으나 영국이 금융산업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여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 영국의 EU 탈퇴 시, 위와 유사한 조치들이 향후 새롭게 도입될 때 영국이 대응할 수단이 없으며 이는 영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 한편, EU의 과도한 금융규제가 영국의 금융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의견 또한 있는바, EU 탈퇴 시 EU의 금융규제에서 벗어나 영국의 독자적인 금융시장 발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그림 20. EU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영국 비중(2013년)
(단위: %)



자료: Blackrock

그림 21. 파운드화 환율 추이(달러/파운드)



주: 2016년 2월 26일 1,3862로 최저점을 기록함.
자료: Datastream,

바. 환율

■ 브렉시트 현실화 시, 파운드화가 약세로 전환되고, 환율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면/낮아지면 파운드화는 약세/강세를 보였음.
- 2016년 2월 19일 EU 정상회담 합의 소식으로 파운드화 환율이 파운드 당 1.44달러로 절상되었으나, 2월 22일 보리스 존슨 前 런던시장 등 유력인사들의 EU 탈퇴지지 선언으로 파운드화 환율이 1.413달러까지 약세로 전환됨.
- 2016년 4월 2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의 EU 탈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후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다시 급등함.
- 5월 20일 현재 파운드화 가치는 1.451달러로 2009년 이후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던 2월 이후 소폭 증가함.
-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영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파운드화를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음.
- 블룸버그는 브렉시트 일정 발표 이전 파운드화와 신흥국 통화의 상관관계가 0 수준이었으나 브렉시트 발표 이후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5월 16일, 0.41)를 근거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국경제에 대한 우려로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함.
- 향후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파운드화는 당분간 약세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10) <http://www.bbc.com/news/business-31725075>.

- EU 탈퇴시 파운드화는 약세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EU라는 든든한 배경이 없기 때문에 환투기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불확실성의 증가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사. EU 예산 기여금

■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더라도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려면 EU 예산에 기여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해 EU 예산 기여금을 통한 예산 절감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EEA¹¹⁾ 등 EU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제통합 모델도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 예산 기여에 대한 의무가 있음.
 - EFTA¹²⁾ 국가들의 경우 1994년 EEA를 결성하면서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EEA 보조금을 EU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EEA 기금뿐만 아니라 별도로 노르웨이 기금(Norway Grant)을 EU에 지불하고 있음.
- 만약 영국이 EU를 탈퇴하여 노르웨이 형태의 경제통합 모델을 선택한다면 10~20%, 스위스 모델은 59% 정도의 순기여금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노르웨이는 2011년에 1인당 106파운드를 EU 예산에 기여했으며, 스위스는 1인당 53파운드를 기여했는데 이는 같은해 영국이 1인당 128파운드를 지원한 것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나지 않음.

■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EU 지원금 삭감은 영국 내 각 지역의 정치적 불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잉글랜드를 제외한 북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는 공동농업기금과 구조기금의 명목으로 EU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동등한 규모의 자금이 계속 지원되지 않는다면 영국이 연방 국가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갈등과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08/9 회계연도 기준 1인당 수혜금액은 북아일랜드 204파운드, 웨일즈 163파운드, 스코틀랜드는 118파운드, 잉글랜드는 52파운드 정도임.
 - 순기여금(기여금-수혜금) 측면에서 북아일랜드는 1인당 106파운드, 웨일즈는 74파운드, 스코틀랜드는 약 0파운드 내외의 지원을 받지만, 잉글랜드의 경우 72파운드의 순 기여를 하고 있어 지역 간 이해관계가 크게 다름.

아. 기타

■ 브렉시트는 교육·연구 분야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가격 하락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11)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은 1994년 1월 1일에 공식으로 출범하였으며 EU 회원국 28개국 및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총 31개국으로 구성된 단일시장지역으로 EEA 역내에서는 상품, 서비스, 역내 국민의 여행과 거주, 노동 등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으나 관세동맹은 아님.

12)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은 1960년 1월 4일 창설된 기구로 현재 EEA 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3개국과 스위스 총 4개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협력체임.

- 기존에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영국과 EU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브렉시트 이후 상당히 차단되고 더 많은 비용과 정보의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o 현재 EU의 스위스와의 교육·연구 분야 교류는 다른 회원국들과의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EU 차원의 연구개발 기금에서 공동연구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됨.
- EU 내 공동농업정책, 공동대외관세의 설정으로 인한 가격의 왜곡현상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o 공동농업정책은 1960년대 이래 EU의 농업을 부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생산량과 연결된 보조금, 가격 지지정책, 수출 보조 등으로 가격과 교역을 왜곡시키는 대표적 금지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o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경제학자들은 영국이 EU 탈퇴 후, 모든 관세를 철폐하여 매우 경쟁적인 국내시장을 형성할 경우, 국내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의 이익이 증가하며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주장함.
- o 브렉시트 반대론자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공동농업정책 개혁조치에 따라 이 정책에 의한 국내가격 왜곡현상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EU 탈퇴 후 가격하락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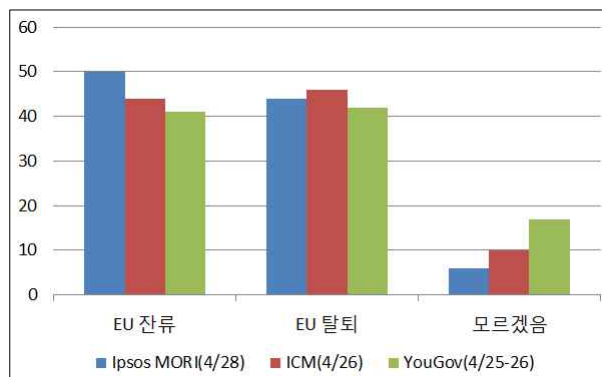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브렉시트 전망

■ 영국의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찬성과 반대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국민투표 때까지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 최근 EU 잔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EU 잔류 지지층이 박빙의 우위에 있으나 조사기관에 따라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브렉시트에 대한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움.
- o 특히 확실한 투표 그룹만을 놓고 볼 때 브렉시트 찬성파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감.
- o 또한 테러, 대규모 난민 사태 등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있을 경우 브렉시트 찬성 여론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림 22. 여론조사 결과(2016. 4)



자료: Yougov; Ipsos MORI; ICM.

■ EU 탈퇴로 결정될 경우 영국이 비EU 회원국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불확실성의 증가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¹³⁾

- 만약 탈퇴로 결정되면 영국은 EU에 탈퇴를 즉시 통보하게 되며 EU 조약에 의거하여 최대 2년 동안 탈퇴협상이 이뤄질 것임.
- 탈퇴를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럽이사회와 탈퇴 신청국이 만장일치로 협의기간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탈퇴 신청국에 대한 EU 조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정지함.
- EU 탈퇴는 전례가 없어 더 길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하여 탈퇴협상이 끝날 때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영국정부는 EU 탈퇴는 전례가 없기에 EU 탈퇴 협상이 약 10년 걸릴 것으로 예상¹⁴⁾

■ 브렉시트 찬성 측은, 탈퇴협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확대로 단기적 혼란 발생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EU의 과도한 보호협정에서 제외되며 경제적 자주권의 확립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영국이 EU 가입 때보다 더 큰 번영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함.

- 보리스 존슨 前 런던시장을 포함한 브렉시트 찬성 측의 경제전문가들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더라도 영국 경제가 4% 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¹⁵⁾
- 브렉시트 시 EU 내 농업 및 제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왜곡되어 높게 설정되어 있던 가격이 하락하여 영국 소비자 물가가 8%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금융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220만 명에 달하는 영국의 우수한 인력 및 인프라를 쉽게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함.

■ EU 잔류를 지지하는 영국정부는 EU 탈퇴 시 당국이 고려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들과 경제에 발생할 장기적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브렉시트 시, EU와의 경제관계에 따라 2030년까지 GDP가 3.4~7.5%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함.
- EU 탈퇴가 영국 경제에 단기적 타격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 부진으로 장기적 타격까지 입힐 것으로 전망함.
- 세수 또한 £200억~£450억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EU 탈퇴로 영국의 공공부채, 세금의 증가 및 재정긴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 EU 탈퇴는 EU 조약 50조에 의거하여 ① 유럽이사회(회원국 정상으로 구성)에 통보 ② EU와 협의 ③ 유럽의회 동의 ④ 유럽이사회 의 가중다수결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침.

14) UK(2016), "The process for withdrawing from the EU."

15) CNN Money(2016. 4. 28), "Obama, the IMF and OECD are all wrong about Brexit, these economics say."

표 6. 영국의 EU 탈퇴 시, 2030년까지의 연간 부담 비용

	EEA	양자협정	WTO
GDP(%)	-3.4~-4.3	-4.6~-7.8	-5.4~-9.5
1인당 GDP	-£1,000~-£1,200	-£1,300~-£2,200	-£1,500~-£2,700
가구당 GDP	-£2,400~-£2,900	-£3,200~-£5,400	-£3,700~-£6,600
세수의 순 영향	-£200억	-£360억	-£450억

자료: HM Government.

■ 브렉시트 이후 양측간 관계에서 영국은 상품, 서비스, 자본 이동과 관련해서는 FTA보다는 더 긴밀한 경제관계를 기대하고 있으나, 반면 EU 예산 기여 축소와 노동 이동의 제한도 요구하고 있음.

- 영국은 EU 시장의 접근성은 유지하여 경제와 금융시장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되, EU 분담금의 부담 감소, EU내 각종 규제 철폐, 역내이주민 제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모델을 찾아 EU와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것임.
- 비EU회원국이면서 EEA 회원국인 노르웨이는 EU 예산에 스위스보다 더 많이 기여하며 노동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영국은 EFTA 회원국인 스위스와 유사하지만 EU와의 협상에 따라 사안별로 약간 차이가 나는 새로운 방식의 특혜무역협정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EU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탈퇴가 이익’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영국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것임.
- 그 결과 예상할 수 있는 양측 간의 관계는 [표 7]과 같이 스위스형보다는 좀 더 느슨하고 FTA 체결국보다는 더 긴밀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¹⁶⁾

표 7. 유럽 내 경제통합체별 접근 범위 및 EU 탈퇴시 영국의 EU와의 관계

	EU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영국	FTA	MFN
EEA	○	○	X	X	X	X	X
제조업자유교역	○	○	○	○	○	○	X
농산물자유교역	○	X	X	X	X	X	X
서비스자유교역	○	○	○	X	○/△*	X	X
인력자유이동	○	○	○	X	X/△/○*	X	X
자본자유이동	○	○	○	X	○/△*	X	X
EU예산참여	○	○	△	X	△/○*	X	X
EU규제	○	○	○	△	△/○*	X	X
공동대외관계	○	X	X	○	X	X	X
원산지규정	○	○	△	○	○/△/X*	X	X
통상정책중속성	○	○	X	○	X	X	X

주: 1) X로 표현된 경우가 교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관세, 내국민대우 등 단일시장의 자격을 상실한 일반적인 WTO 회원국(MFN)의 상황을 표현.

2) 브렉시트 후 EU와의 협상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표현함. 앞부분이 대체로 영국이 선호하는 형태, 뒷부분이 EU의 선호 형태로 추정됨.

자료: 저자 정리.

16) 터키는 EU와 관세동맹국으로서 스위스형과 FTA형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으나, 영국이 추구하는 관계와는 다른 형태가 될 것임.

나. 정책 시사점

■ 브렉시트 찬성 결과가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시장 △교역부문 △투자 부문에서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금융시장] 단기적으로 브렉시트는 전 세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파운드화 및 유로화의 약세로 이어질 것임. 이는 원화의 동반 약세, 외국자본 유출 등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교역부문] 중기적으로 영국과의 교역에서 관세체제와 세관행정의 부재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영, 한-EU 간 무역관계가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함.
- [對유럽 투자] 불확실성의 증가로 유럽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실될 수 있으며, 기존 對영국 투자가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의 경우 영국을 EU 시장 진입의 관문으로 여겨 영국 투자를 결정해왔기 때문에 브렉시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충격은 곧 회복되고 영국 및 EU를 제외한 세계경제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됨.

-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결과가 찬성으로 나타나도 당장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음.
- 리스본 협약에 의거, 브렉시트가 실제로 현실화되기까지는 2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단일시장체제, 제3국과의 특혜무역협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임.
- 이 기간 동안 영국과 EU가 협상을 지속하여 새로운 특혜무역 및 투자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2년이라는 새로운 시한이 생기기 때문에 2년 안에 협상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시한이 가까워 옴에 따라 불확실성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가속적으로 커질 것임.
- 2년 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과의 경제관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농후함.
- 영국 및 EU가 한국을 비롯한 제3국과 맺은 50여 개의 특혜무역협정을 2년 내 다시 재협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년 뒤 제3국과의 경제관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영국과 EU 간 경제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설정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축적되어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경제에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표 6).
- 2년의 협상기한 동안 불확실성이 점증하며, 궁극적으로 제3국과 경제관계가 다시 안정되어도 장기적으로 보아 영국의 투자매력도가 감소하고, 파운드화의 변동성이 커지며, 영국 금융산업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지난 65년 동안 진행되어 온 유럽통합 운동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면서 EU체제의 혼란, 다른 회원국의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 증대, 또는 영국-EU 간 관계 악화 등 다양한 위협과 불확실성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는 FTA를 포함한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를 광범위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 문제 △원산지 누적의 허용 여부 △한-영 FTA의 협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EU FTA는 EU에 영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춰 체결한 협정으로 영국의 EU 탈퇴 시 EU의 경제규모 및 시장규모의 축소로 인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GATT 28조 및 GATS 5조에 의거, 관세보상협상을 할 수 있음.
 - 1985년 그린란드의 EU 탈퇴 후,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EFTA와 FTA 협상을 할 때 보상 혹은 그 이전의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된 바 있음.
- 영국의 EU 탈퇴 시, EU와 영국 간 원산지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한-EU FTA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논의가 필요함.
 - 영국과 EU 간 누적을 허용하지 않든가, 누적을 허용할 경우 한국과 분업구조가 잘 갖춰진 제3국과의 다자 누적을 요구할 수 있음.
- 브렉시트 후, 한-영 FTA를 독자적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전문직 인력이동(Mode4), 또는 서비스 분야 시청각 서비스의 개방 문제 등의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음. **KI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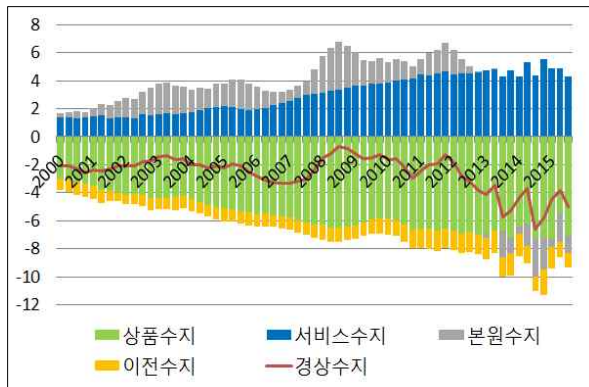
[부록] 영국경제의 최근 동향

■ 영국경제의 규모는 2014년 기준 GDP 2조 5,680억 유로로 EU 회원국 중 2위(전체 EU 회원국 GDP 대비 16%)이며,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강한 면모를 갖추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이 저성장 국면에 있는 가운데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전년대비 2.2%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그림 1).
- 영국은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 전반의 수요 개선에 기인한 투자 활성화의 영향으로 2013년 중반 이후 2% 이상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양상임(표 1).
- 영국경제는 서비스산업이 총부가가치 대비 74%의 비중을 차지하며 서비스산업에 특화되어 있음.
- 영국의 서비스산업 중 금융보험업(8.17%), 법률회계자문서비스(3.61%) 등 전문서비스의 비중이 높음.
- 총부가가치 대비 금융산업의 비중에서 보면 영국은 독일, 프랑스 등 타 회원국보다 높음(그림 3).

그림 1. 영국의 경상수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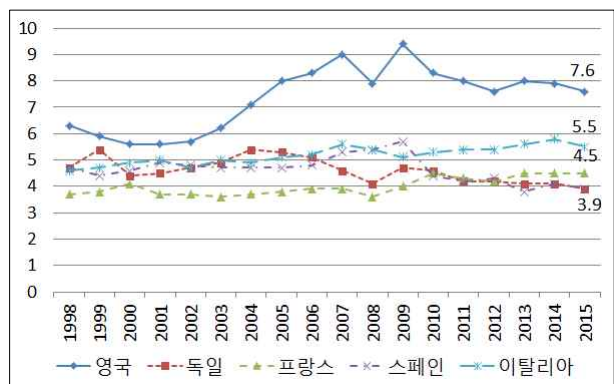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중,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2. 총부가가치 대비 금융산업의 비중

(단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표 1. 영국의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추이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4	2/4	3/4	4/4	연간	1/4
GDP	1.5	1.6	1.2	2.2	2.9	0.5	0.6	0.4	0.6	2.3	0.4
- 민간소비	0.0	0.1	1.8	1.9	2.5	0.8	0.8	0.5	0.6	2.7	0.7
- 정부지출	0.2	0.1	1.8	0.5	2.5	0.4	0.7	0.7	0.3	1.5	0.2
- 투자	5.0	2.0	1.5	2.6	7.3	1.5	1.3	0.4	-1.1	4.1	1.4
- 수출	5.8	5.8	0.7	1.2	1.2	-0.1	2.8	-0.5	0.1	5.1	0.1
- 수입	8.3	0.6	2.9	2.8	2.4	3.5	-2.5	2.9	0.9	6.3	-0.3

주: 1)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자료, 분기자료는 전분기대비 자료임(계절조정).

2) 투자의 경우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의미함.

3) 2016년 1분기의 기울임꼴 수치는 Oxford Economics의 전망치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Oxford Economics.